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하면 되지, 또 모아놓고 보고회는 무슨 보고회냐’, 그렇게 얼핏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와서 보고회를 마치고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 중요하고 꼭 올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업, 재계, 그리고 학계, 정부에서도 왔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각계에서 다 오셔서 여러 가지 뜻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서로간에 이해를 높이고 오늘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을 모아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겠지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약이나 추락이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추락은 없고 도약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한 역시 도약하려면 우리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다짐의 자리가 된다면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혁신경제, 이것을 우리의 도약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산업자원부가 함께 행사를 준비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만 주는 자리인가 생각했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부에게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로부터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꼭 좀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조용히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아가서는 언론이 지켜보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가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장관들이 이미 답변을 했지만 제가 모아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선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는 이미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혁신경제, 이것을 우리의 도약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력양성, 이것 역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해 나갑시다.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제문제가 있습니다. 규제에 관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것은 대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전에 수도권 공장 하나를 승인할 수 있었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돌이켜서 기록을 보니 작년 3월25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LCD 산업단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뒤에 내부방침으로 하반기에 가

면 삼성과 쌍용의 공장건설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얘기하고, 개별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제계 간담회에서 47개 건의가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정부부처에서 해결됐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 다음 국무회의에서 부처에서 판단해 해결되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무회의에 올려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회의를 열어 하나하나 심사해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을 위해서 또는 노동보호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함부로 풀지 않겠습니다. 지난 날 여러 차례 그런 규제를 풀어서 부작용만 나타나고,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지불하고,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풀 것은 과감히 푼다는 원칙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규제를 하나 통과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도장이 몇 백개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비용, 도장 개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이 속도가 그렇게 빨리 안 돼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속한 시일 안에 규제를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 하나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수도권 규제의 개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사례 보니까 이처럼 중대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핀란드 경우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한 기간을 봤는데, 계획에 2년이 걸렸습니다. 아일랜드가 노사정간에 사회적 협약을 맺고 난 뒤에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0년 뒤에 효과가 나도 좋고, 15년 뒤에 효과가 나도 좋고, 장기적으로라도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 임기 안에 효과가 나든 안나든 관계없이 반드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왜 또 산자부와 정통부에도 다 받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엽적인 것까지 말하기가 미안하나 특허와 기술적으로 실용성이 있다는 것과 품질규격을 판단하는 것과 시장성이 있는 것과 각기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용실안을 받은 일이 있는데, 실용신안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일동 웃음)

정책금융이라든지 신용보증의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작년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기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부동산 담보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력이나 장래 시장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도록 정부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지금의 금융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우선 어려운 것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정책금융이라든지 신용보증의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며칠 전에도 정통부장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정통부장관도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 산업 부분은 이미 착수해서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복합 서비스클러스터도 민간분야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해고 부자유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부분에 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때문에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현실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수준은 판례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의 유연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지 2개월 전에 협의하고 통지하게 돼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줄이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해고가 왜 어려운가, 해고가 어려워서 비정규직을 계속 써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적 연유로 인해 대단히 강경한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금 다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수의 대기업, 강력한 투쟁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누리고 있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나머지는 노동자들이 해고 부자유에 보호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장관이 말한 대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정비되었을 때라

야 정부도 노동의 유연화정책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사실은 풀어버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수도권 규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수도권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합작으로 투자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에 가서는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수도권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수도권 규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지방의 기대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 위에서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조그마한 규제 하나를 풀려고 하면 전 지방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단체장들이 서울에 와 기자회견 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수준의 상황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은 계속 위축돼 가니까 수도권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목이 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수도권의 몇 건의 규제를 풀었는데, 것처럼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지방의 기대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

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방의 신뢰를 어느 정도 받았고, 그를 통해 상생의 모델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을만한 정부의 대책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현재 상태로 지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은 수도권에서라도 경쟁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저는 지방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지방발전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이고, 행정수도이전 정책이고, 기업도시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경련과 재계에서는 기업도시계획을 세워서 지방을 육성할 전략을 세웠고, 정부에서는 지방혁신도시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만나 통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보도를 통해 전달된 것을 보면 기업도시가 많은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의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냥 기업도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수도권이든 충청권이든 어디든 엄청난 특례와 특혜가 부여되는 기업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기업들이 요구한 것처럼 전달됐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나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이죠?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그렇습니다'라며 '이제는 추진주체인 전경련이나 재계에서도 관계자들이 이해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함)

정부도 기업도 지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실천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

게 되면 수도권과 함께 균형 있게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국가적 계획과 전략이 큰 갈등없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규제에 관해 많은 말씀을 했으나 규제를 해소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이와 같은 상생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조금 전에 LG 연구원 원장이 보고했는데, '뉴딜 프로젝트'라는 큰 틀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참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딜 개념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나 제가 거기에 몇 개의 내용을 추가해서 '뉴딜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상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에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가는 경제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모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에 가는 모델, 노와 사가 함께 협력해가는 경제 모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경제모델, 이것을 함께 얘기한다면 '상생의 경제모델'을 뉴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보면 서비스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생의 전략을 21세기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략으로 채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규제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업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고, 또 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투자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투자 안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굴복해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고 말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은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정부가 이와 같은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과 수도권 관계에 있어서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상쟁의 구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간에 지금도 대결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어떻게든 협력적 노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동안 겪어보고 “이제는 이 정부를 좀 믿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정부 장관들 불러놓고 다짐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합니다.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는 것은 어떤 정책의 공정성이나

순수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기업적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신뢰를 받으면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모여 앉아 주거나 받거나 풀어주고 투자하고 합의하고 하더라도 무슨 그 위에 장애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해관계에 의한 반대가 있겠지만 거기에도 신뢰가 있으면 협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본조건을 충족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훨씬 더 투명해지고 있고, 투명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 졌습니다.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굴복했구나 하는 소리는 혹시 들을지 모르지만 뒷거래를 했구나 하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 토대도 이제 마련돼 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요청과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관철해야 할 주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할 수용의 자세로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생의 가능성을 하나씩 둘씩 쌓아 가면 우리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그러나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는 우리 경제에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전략적인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뉴딜 프로젝트'라고 해도 좋고 '상생의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성공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말씀드

리기 위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기업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적 지지와 양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있는데, 집단간 이견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상생의 경제'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고, 작은 신뢰 하나를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